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5. 19.(목)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7차,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5월 9일에 있었던 제2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27-09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 기준,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2016년 2월 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 규제위 규제심사 등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신고·등록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서 면제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상황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황 제출시기, 제출자료 및 공표시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6월까지는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27-97~10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통신사 영업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와 제29조를 위반한 4개의 통신사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배경은 2015년도 3월부터 2016년도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29개 영업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디엠비(DMB) 삼천점, 모바일팩토리, (주)아이엠티정보통신, 감장통신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수집·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엠비(DMB) 삼천점과 모바일팩토리는 수집·이용목적은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4개의 영업점 모두에 대해서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 7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의 위반과 관련해서 디엠비(DMB) 삼천점과 모바일팩토리는 소상공인 기업이고, 위반행위가 조사 당시 시정조치된 점을 감안해서 50%를 감경하여 500만원을 부과하고, (주)아이엠티정보통신과 감장통신은 소상공인 기업이고, 위반행위가 시정조치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건수가 48건으로 경미한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 고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과 관련해서 디엠비(DMB) 삼천점은 소상공인 기업이고 위반행위가 조사 당시 시정조치되었으며, 형사벌 수준이 과중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고,

모바일 팩토리는 조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또 10월 조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보관하였으며, 또 해당 회사가 제출한 의견은 사실 확인을 위해 금년 3월 재조사한 결과, PC 내 일부 개인정보만 파기하고 외장하드디스크에 있던 정보는 전혀 삭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 관련해서 <1>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디엠비(DMB) 삼천점이 있는데 여기 위반사항에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6,943건을 괄호 열고 써 놓은 것이 2007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엑셀파일 형태로 수집·이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고 2012년 8월부터 위법하게 됐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2007년 4월부터 수집한 것은 수집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고, 그다음에 2014년 8월부터는 적법하게 수집한 것도 전부 파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2007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집했다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6,943건 중에 구분이 되면 구분하시고 만약에 구분이 안 되면 적법하지 않게 수집한 것과 2014년 8월 18일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내용과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하나만 확인할 것이 2페이지를 보면 조사대상, 사업자와 관계, 지금 영업점은 판매점들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거기를 보면 경기도 2곳 뉴스피드, T-PLUS, 그리고 영·호남에 SK T-world 폐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들은 폐업하면 점주라고 해야 합니까? 점주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폐업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제재를 못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어떤 법 위반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영업을 한다거나 다른 곳에서 다른 명의로 하는 것인데 최소한 우리가 이 영업점은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이때 물론 차명도 있을 수 있지만 운영했던 운영주들을 파악해서 이후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DB로 보관해야 이후에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또 폐업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업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법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은 계속 하고요. 그것을 방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곧바로 상호명을 바꾸든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폐업을 했지만 소위 말해 유통점주, CEO 대표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업한 3개 업체의 경우 저희가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만 꼭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해서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소지가 상당히 있을 때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상호로 다시 재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대상 리스트에는 올라왔지만 폐업을 해서 조사를 못한 경우에는 그 폐업한 업체 대표자의 이름을 저희가 꼭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또 개업했는지 스크린 해 본다든지, 또는 문제가 됐을 때 같은 동일인이 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대조를 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추적조사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27-101 ~ 11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와 제28조를 위반한 1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작년도에 대구·부산·인천지방경찰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온 67개 웹하드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유통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기프트엠 등 12개 사업자는 다음 4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우리정보통신 등 8개 사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이

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위반에 해당이 되고,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정조치(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정명령입니다. 13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도 7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기존의 심결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세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과 관련해서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에서 (주)기프트엠, (주)이앤비미디어, (주)우리정보통신, 그리고 대신네트웍스(주) 등 4개 사업자는 위반행위가 1개이고,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오키컨세션은 위반행위가 1개이고, 보안장치는 설치·운영하였으나, 장비의 정책설정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 수정 및 캐시충전 페이지에서만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지 않은 점과 시정조치된 점을 감안해서 30% 감경하여 700만원, 소기업인 (주)픽스는 위반행위가 1개이고, 시정조치된 점 등을 감안해서 50%를 감경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기업 중에 라이브스코어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나, 시정조치된 점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도 600만원으로 매우 영세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윤넷, BM 커뮤니케이션즈, 대경모바일, (주)정상커뮤니케이션즈, (주)BH컴즈 등 5개 사업자는 위반행위가 1개이고, 시정조치된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위반과 관련해서 중기업인 (주)우리정보통신, 대신네트웍스(주)는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1,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인 픽스는 시정조치된 점을 감안해서 30% 감경한 7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인 (주)윤넷, BM 커뮤니케이션즈, (주)새누리, 대경모바일, (주)BH컴즈 등 5개 사업자는 위반행위가 시정조치된 점을 감안해서 50% 감경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12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시점이 2014년 11월 29일 이전으로 구(舊)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시점에서의 로그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종업원수 5명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거나 또는 유예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감경폭도 다른 경우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또는 지금과 같은 초고속인터넷 판매점들인데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상시종업원 수는 많지 않더라도 매출이 또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영세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지침을 적어놓았는데 거기에서 <1>번, <2>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이것은 매출액이 고려가 되어 있는데 <3>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오로지 종업원 수만이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종업원 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 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24분 폐회 】